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 교환

남북 적십자가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했다.

대한적십자사(한적)는 3일 '8·15 광복절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를 위해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한적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산동 한적 서울사무소에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를 들고 판문점으로 출발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 11시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생사확인회차 명단을 교환했다.

남측은 250명, 북측은 200명의 명

## 남측 250명·북측 200명 명단 교환해

### 양측 100명씩 최종 명단 8월4일 교환

단이 담긴 의뢰서를 교환했다. 남측 의뢰서에는 이산가족 명단과 북측 가족의 인적 사항이 담겼다.

남북은 이날 생사확인 의뢰서를 확인하면 25일까지 생사확인회차 등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이후 최종 상봉 대상자 각각 100 명씩을 선정해 8월4일 최종 명단을 교환하는 것으로 상봉 준비를 마무리한다.

최종 남측 상봉자들은 상봉 행사 전날인 8월19일 방북교육을 받고 상봉장소로 이동한다. 상봉행사는 8월 20~26일 금강산 변희소에서 열린다.

이번 제2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15년 10월 제2차 행사가 열린 지 2년10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통일부 이산가

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은 13만2124명이다. 이 가운데 5만6890명이 생존해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다.

연령별로는 90세 이상 1만2391명(21.8%), 80~89세 2만3569명(41.4%), 70~79세 1만2743명(22.4%), 60~69세 4543명(8.0%), 59세 이하 3644명(6.4%) 등이다.

가족관계 별로는 부부·부모·자녀 2만5017명(44.0%), 형제·자매 2만3544명(41.4%), 3촌 이상 8329명(14.6%) 등으로 나타났다.

뉴스스

## 태풍 북상 틈 노려 폐수 바다에 버린 선장 덩이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틈을 노려 선박의 폐수를 바다에 버린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안도해양경찰서는 3일 선저폐수를 해상 불법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9.16급 어선의 선장 A(54)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45분께 전남 안도군 완도항 인근 해상에서 폐기물 등이 섞여 있는 선저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혼란한 틈을 이용해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선박의 기관실에 설치돼 있는 펌프를 이용해 폐수를 바다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선박에서 발생한 폐기물 등 폐수는 따로 저장한 뒤 관련 업체에 버려야 하며 불법 배출을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경은 바다에서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 A씨를 적발했다.

한편 안도해경은 상반기 해양오염사고 6건을 적발했으며 기름 등 117t을 수거했다.

안도=김광수 기자

## 요양원 나선 뒤 실종 70대 男 숨진채 발견

광주 한 요양원에서 나와 실종된 70대 남성이 숨진채 발견됐다.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50분께 광주 광산구 송촌동 황룡강 경동교 인근에서 70대 남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

남성은 숨져 있는 상태였으며 신원조회 결과 지난달 28일 실종된 A(74)씨로 확인됐다.

A씨는 요양원을 나와 택시를 타고 황룡강 인근으로 이동한 뒤 행적이 사라졌다.

경찰은 A씨가 택시에서 내린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였으며 4.8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유족에 인계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해군 장성, 여군 장교 성폭행 미수...보직해임

현역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하려다가 긴급 체포됐다.

해군은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 모 부대 소속 A준장을 준강간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A준장은 지난달 27일 여군 B장교의 부대 밖 개인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B장교를 두 차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전 A준장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과거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B장교를 전화로 불러냈다.

A준장은 B장교의 숙소로 이동해 추가로 함께 술을 마셨고 B장교가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해군은 보고 있다.

B장교는 의식을 되찾은 새벽에 A준장이 추가로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2일 피해자인 B장교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소속 부대 지휘관이 이상하게 여기고, 부대 양성평등상담관을 통해 2차 상담을 거쳐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B장교의 소속 부대 지휘관은 관련 내용을 인지한 뒤 즉시 지휘계통으로 해군 본부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해군 헌병대는 3일 새벽 A장성을 관사에서 긴급체포해 보직해임 조치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현재 가해 장성은 B장교와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자기 방어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를 확정할 방침이다.

해군은 또 B장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선 변호인을 제의하는 한편, 피해자 참고인 조사 때 변호인 임의 회에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자 상담을 통해 보직 및 근무지 이동 등 인사조치를 원할 경우 B장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여순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 광주·전남 시민단체

광주·전남 지역 교수와 시민사회단체가 3일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과 유가족 보상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생명존중과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해 가칭 ‘여순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할 것도 요구했다.

또 “특별법이 국방부의 반대로 심의조차 못 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2010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수를 2043명으로 확정된 보고서를 부정하는 반역사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여순사건은 냉전 시대의 이념 틀이 아닌 민중의 생명·생존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해복은 이념 대립에서 탈피해 민족적 비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주 여순연구소장은 “여순사건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증언록과 학술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학술세미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순사건은 화해와 상생의 민족사적 계기이자 생명·인권·평화 등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인류사의 신기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서울태풍 수증기 영향으로 짙더위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경로가 예상보다 동쪽으로 치우치면서 수도권 지역이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났으나 태풍 수증기 영향으로 서울 최고 기온이 32도를 기록했다. 기상청이 관측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중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걷는 너머로 맑고 동계 구름 가득한 하늘이 보인다.

## 광주경찰, 사건 당사자 인권보호 강화

광주경찰청은 인권위원회를 확대·개편하는 등 피의자와 피해자·참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인권위원 6명을 추가 위촉하는 등 인권위원회를 확대·개편했다. 전체 11명의 인권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1명에서 5명으로 높였다. 시민단체와 종교계 등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방어권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변호인 참여 실질화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 일시와 장소를 사전 협의하고, 모든 피의자는 변호인의 참여 아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사내용에 대한 메모와 조사 중 조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변호인의 의견진술과 휴식 요청 권도 적극 보장하도록 했다.

실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피의자 신문 과정 등에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는 113건으로 전년 동기 29건 대비 389% 증가했다.

광주경찰청은 또 여성 상대 범죄 수사관을 대상으로 정기적 교육을 하고, 조사환경을 개선해 수사 과정

상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지난 5월부터는 사건 해결뿐만 아니라 수사 절차상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역할까지 하는 이른바 '버디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광주경찰청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권보장과 피해자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봉우 기자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농지연금사업
- 농지규모화사업

###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 농지임대수탁사업**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료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농민이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해부채 등 경영위기가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